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삼청교육대와 빈민통제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손 광 명

삼청교육대와 빈민통제

홍 석 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손 광 명

# 인 준 서

손광명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광주항쟁에서 빈민은 군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항쟁의 확산을 우려한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항쟁을 강경하게 진압한 후, 전국적으로 ‘불량배’ 단속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나 중산층 시민보다 빈민이 많이 연행되었는데, 잠재적으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빈민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량배’로 몰아가며 단속하였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이러한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신군부는 ‘불량배’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하였지만, 전과가 전혀 없거나 이미 법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다.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불량배’란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람들이 쉽게 강제 연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언론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진짜 ‘불량배’인 것처럼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 ‘불량배’는 처벌해도 된다는 사회적 편견과 맞물리면서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피해자들은 짧게는 4주, 길게는 5년 이상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연행되면서 신군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는 그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복귀하여 불만 세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순화교육뿐만 아니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 처분까지 실행하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켰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특히 ‘잠재적 저항세력’인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신군부는 언론을 활용하여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장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라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전과를 통해 그들의 일상 전반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였다. 빈민은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뒤에도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는 삼청교육대 사업을 활용하여 빈민을 통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길들이려 하였다. 우선 ‘불량배’와 거리가 멀고 빈민이라 할 수 없는 지식인층을 길들이기 위해 삼청교육대에서 이른바 ‘군기 잡기’를 실행하였다. 또한 신군부는 ‘불량배’로 표상된 피해자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은 신군부의 힘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불량배’로 향한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 일반 시민은 삼청교육대 사업에 동참자가 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사업을 빈민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의 폭력성과 인권 의식, 그리고 통치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빈민통제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 피해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삼청교육대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머리말 .....	1
II. 민주항쟁에서 빈민의 참여와 정부의 대응	
1. 부마항쟁과 불량배 일제 단속 .....	6
2. 5·18 광주항쟁과 불량배·강패 단속 .....	14
III. 삼청교육대 강제연행의 기획과 실행	
1. ‘삼청계획 5호’의 입안 과정 .....	21
2. 강제연행과 장기구금 .....	26
IV. 불량배 낙인찍기와 정치·사회적 효과	
1.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 .....	33
2. 빈민통제와 시민순화 .....	41
V. 맺음말 .....	54

## 참고문헌

## ABSTRACT

## I. 머리말

1980년 5월 31일 출범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집권 기반을 마련한 신군부는 일련의 사회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깡패 소탕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운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다.<sup>1)</sup> 박정희 정권은 민심 수습과 사회 통제력 강화를 위해 깡패를 소탕하였는데, 통념적으로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사업도 그것의 연장선에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정권의 깡패 소탕과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사업은 유사성도 존재하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일단 삼청교육대 사업은 박정희 정권의 깡패 소탕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그 기간도 길었다. 박정희 정권의 깡패 소탕 사업이 민심수습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면, 삼청교육대 사업은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군부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는 작업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5·16 쿠데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성공했지만, 신군부의 쿠데타는 5·18 광주항쟁을 유혈진압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황과 여건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만든 『삼청교육대백서』에서도 신군부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sup>

신군부는 “불량배”를 잡아간다고 했지만, 강제 연행된 사람들은 대부분 농마주이나 구두담이, 무직자와 같은 빈민이었다. 수많은 빈민이 삼청교육대로 연행된 것은 부마항쟁과 5·18 광주항쟁과 무관하지 않다.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광주항쟁은 학생들의 시위가 도화선이 되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항쟁이 지속될수록 빈민들은 학생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폭발적인 저항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359쪽.

2)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삼청교육대백서 (상)』, 하나로, 2001, 235쪽.

력을 보여주었다. 항쟁 이후 빈민은 군사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이 글은 신군부의 빈민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삼청교육대 사업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빈민에 대한 통제는 박정희 정권 시기, 나아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다. 각 시기마다 배경과 목적, 방식 등에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왜 정치권력이 빈민을 통제하려 했는지 그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빈민 정책은 광건홍, 조영윤, 유선영, 예지숙 등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광건홍과 조영윤은 공통적으로 조선총독부가 빈민을 구제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단순히 식민지 후반 전쟁 수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목적에서 빈민을 활용했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이들은 조선총독부가 빈민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려 했는지 분석하고 있지만, 빈민통제의 정치적인 측면과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력 동원 등의 문제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유선영과 예지숙은 조선총독부의 ‘부랑인’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초기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부랑인 정책을 실행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인 측면과 연결시켰다. 유선영은 조선총독부가 부랑자에 잠재적 범죄자라는 ‘스티그마(stigma)’를 부여하여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전 조선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강조하였다.<sup>4)</sup> 예지숙도 부랑인은 신분범죄자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조선총독부가 노동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자의 타자로서 부랑인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랑인을 통해 노동과 非노동

---

3) 광건홍,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조영윤, 「1920~1930년대 빈민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4)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식민지 초기 부랑자표상의 현실효과」, 『사회와역사』 89, 한국사회사학회, 2011

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몰으려 했다는 것이다.<sup>5)</sup>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부랑인 정책이 단순히 부랑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단속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 전체를 기존 지배체제에 길들이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또한 지적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빈민 정책과 관련해서 김아람은 부랑아들이 ‘구악일소’라는 명분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도, 개척단과 자활근로대에서 산업발전과 재건의 주체로 호명되어 국토개발 사업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반면 정수남은 부랑인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자로서 호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4월 혁명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 주체가 되기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sup>7)</sup> 김원도 4월 혁명 이후 박정희 정권은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하층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박정희 정권이 단순히 범죄 예방과 사회 혼란의 방지 차원에서 부랑인을 단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박정희 정권은 ‘빈민’을 두려워했고, 정권 유지를 위해 빈민을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국토건설단 사업 등을 벌였다는 것이다.

박홍근은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 정책이 어떤 주체를 만들기보다 ‘정상’과 ‘비정상’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주장하였다. 부랑인을 지속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sup>9)</sup> 박

---

5)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2014;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역사』 107, 한국사회사학회, 2015

6)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7) 정수남, 「1960년대 ‘부랑인’ 통치방식과 ‘사회적 신체’ 만들기」, 『민주주의와 인권』 15,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8) 김원,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9) 박홍근,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 -닝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8, 한국사회사학회, 2015

정희 정권은 부랑인 그 자체를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들을 활용하여 전 사회구성원을 자기규율화 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박정희 정권의 국토건설단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임송자는 국토건설단의 대상이 불량배나 깡패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역기피자와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국토건설 사업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한규한도 국토건설단 사업에 병역기피자와 고학력자, 직장인들이 더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해 이들을 동원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도 강했다고 강조하였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해서 그는 국토건설단은 사회적 배제와 은폐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재건의 역군으로 홍보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11)</sup> 삼청교육대는 부분적으로 TV나 신문에서 선전되었지만, 사회와 격리된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이 이루어졌고, 근로봉사도 일반 건설 사업이 아니라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진지구축 등의 사업에 국한되었다. 때문에 선전보다는 격리가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두 사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청교육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임상혁과 홍석륜이 있다. 임상혁은 국보위와 계엄포고령, 그리고 사회보호법의 법적 요소를 검토하면서 삼청교육대의 위헌성을 강조하였다.<sup>12)</sup> 삼청교육대의 법적인 문제점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홍석륜은 삼청교육 피해자인 박영두의 저항과 죽음을 소재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삼청교육대 사업을 살펴보았다.<sup>13)</sup> 여기서는 4월

---

10) 임송자,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 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11) 한규한, 「5·16 쿠데타 직후 국토건설단과 지식청년 ‘군기잡기」,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12) 임상혁,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법과 사회』 22,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13) 홍석륜, 「박영두 사건과 삼청교육대」, 『역사와책임』 7,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2014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광주항쟁에서 빈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군사정권은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빈민통제라는 차원에서 삼청교육대 사업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군부가 빈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빈민통제는 단순히 빈민 그 자체를 통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을 길들이는 사회통제의 성격도 있었음을 또한 지적해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광주항쟁에서 빈민의 참여와 활동,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군사정권의 불량배 일제 단속의 과정들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삼청교육대 사업이 입안되어 장기구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군부가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빈민을 통제하고, 일반 시민을 길들이려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측 기록으로 『계엄사』와 『국보위백서』 등을 활용하였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수기와 자술서, 『삼청교육대백서』 등을 살펴보았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도 살펴보았다. 이밖에 노동자들의 문서, ningma주이들의 공동체에서 발간한 잡지인 『닝마』, 「삼청교육대 피해자 접수 보고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2002년에 방영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제작진이 수집한 자료 등도 활용하였다.

## II. 민주항쟁에서 빈민의 참여와 정부의 대응

### 1. 부마항쟁과 불량배 일제 단속

1979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박정의 정권에 저항하는 항쟁이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항쟁의 중심이었지만, 날이 저물수록 노동자, 상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참여가 늘어 이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다.<sup>14)</sup> 이들은 파출소와 경찰서를 공격하여 파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 중부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사 등을 파괴하고 투석을 하였다.<sup>15)</sup>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sup>16)</sup> 그러나 항쟁의 불길은 인근 마산으로 옮겨져 타올랐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마산항쟁도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하였다.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이르러 노동자와 상인, 무직자 등이 항쟁에 참여하였고, 파출소와 세무서, 방송국 등 공공기관과 언론사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시위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였다.<sup>17)</sup>

부산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자와 상인,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항쟁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항쟁 당시 참여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부산대생이었던 김정호는 “끝까지 투쟁한 사람들은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룸펜, 빈민, 노동자들이었고, 학생들은 맨 먼저 이탈”했다고 하였다.<sup>18)</sup> 부산대 교수였던 이대우는 “다방 아가씨와 술집의 호스티스들까지

14) 김원, 앞의 글, 2006, 432쪽.

15)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중항쟁사』, 1985, 60쪽.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335쪽.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위의 책, 2009, 349쪽.

18) 김정호 증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

나와 박수치고 고향”을 질렀다고 하였다.<sup>19)</sup> 엠네스티 부산지부 간사였던 허진수도 “앞서서 시위를 주도하거나 파괴에 나섰던 사람들은 작업복 차림이거나 허름한 차림의 룬펜”들이었고, “새벽까지 남아서 투쟁의 최전선에 나선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민중들”이라고 하였다.<sup>20)</sup>

마산의 항쟁 주체에 대해서는 『경남매일』의 남부희, 김현태 기자가 당시 현장을 취재하여 작성한 「마산 경남대학교 소요사건 1차 발생 보고서」(1차 보고서)<sup>21)</sup>와 「마산지방 대학생 소요사건 2차 발생 보고서」(2차 보고서)<sup>22)</sup>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보고서에는 18일부터 20일까지 마산에서 연행된 사람과 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선 1차 보고서에 있는 피연행자의 직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79년 10월 18일 마산지역 피연행자

직업	인원	%	직업	인원	%
총인원	298				
남학생	38	12.7	남 은행원	2	0.6
여학생	2	0.6	여 은행원	5	1.6
재수생	5	1.6	공무원	4	1.3
상인	18	6.0	무직 남	25	8.3

남 자료집』(약칭 『부마항쟁 자료집』), 1989, 123쪽.

19) 이대우 증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항쟁 자료집』, 1989, 128쪽.

20) 허진수 증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위의 자료집, 1989, 140쪽.

21) 남부희, 김현태, 「마산 경남대학교 소요사건 1차 발생 보고서」(1979년 10월 19일 작성),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위의 자료집, 1989, 39~55쪽 수록.

22) 남부희, 김현태, 「마산지방 대학생 소요사건 2차 발생 보고서」(1979년 10월 20일 작성),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위의 자료집, 1989, 56~67쪽 수록.

여 상인	4	1.3	무직 여	7	2.3
공원	73	24.4	구두담이	1	0.3
회사원	22	7.3	기타 남	63	21.1
여사원	5	1.6	기타 여	7	2.3
군인	2	0.6	운전자	7	2.3
근로자	8	2.6			

\* 출전: 「마산 경남대학교 소요사건 1차 발생 보고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1989, 48쪽.

\*\* %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기록하였음.

총 연행자 298명 가운데 학생은 40명으로 13.3%이다. 그러나 공원과 무직자, 근로자, 운전자, 구두담이 등 빈민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1명으로 40.6%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빈민이 항쟁으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보고서에는 같은 날 영장이 신청된 총 41명의 직업도 구분하고 있는데, 학생 18명과 회사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원과 노동자, 종업원, 무직자 등이다.

2차 보고서에는 19일에서 20일까지 총 177명의 피연행자가 기록되어 있다. 1차 보고서와 달리 직업 구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생 19명, 고교생 3명, 회사원 19명, 방위병 1명, 노동자 63명, 무직자 56명, 기타 1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총 24명의 구속자에서도 대학생 3명과 고교생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과 노동자, 점원, 무직자 등이다. 2차 보고서에도 공원과 노동자, 무직자 등 빈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를 통해 살펴봤을 때, 마산에서의 항쟁 주체는 빈민이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발간한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에는 「10월 부마항쟁 구속자」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부마항쟁으로 총

1,563명이 구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이 가운데 8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31명이 일반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31명은 1979년 12월 8일 공소 취하로 전원 석방되었지만,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중 20명은 형을 선고 받았다. 형선고를 받은 20명을 구분하면, 학생은 7명, 공원 5명, 무직자 4명, 상인 1명, 기타 3명이다. 총 구속된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적지만, 상당수의 빈민이 부마항쟁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부마항쟁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이 학생들의 자리를 대신하였고, 야간에 이르러서는 공원과 노동자, 무직자, 종업원 등 빈민이 시위대를 이끌었다. 이들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이었다.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979년에는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상승하였다. 실상가상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부가가치세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빈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다.<sup>24)</sup> 부산과 마산은 일용노동자, 서비스업 노동자, 영세상인, 실직자 등 빈민이 밀집해 있는 경공업 중심의 도시였다.<sup>25)</sup> 따라서 경제 위기는 부산과 마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빈민이 증가하였다. 생활이 어려워진 빈민들은 사회적 불만이 쌓였고, 결국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항쟁에 참여한 것이었다. 김재규도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부마항쟁은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다고 하였다.<sup>26)</sup>

부마항쟁에서 항쟁 주체는 빈민들이었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18일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부

2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앞의 책, 1985, 63쪽.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앞의 책, 2009, 297~298쪽.

25)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위의 책, 1985, 49쪽.

26)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2』, 사계절, 1984, 858~860쪽 수록.

학생과 시민, 불량배가 합세하여 난동을 부린” 것이었다고 발표하였다.<sup>27)</sup> 구자춘 내무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일부 불량배가 가세”하였고, “2백여 명의 연행자 중 1백여 명이 불량배”라고 하였다.<sup>28)</sup> 최석원 부산시장도 19일 담화문에서 “일부 대학생들과 이에 동조, 편승한 불량배들”이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였다.<sup>29)</sup>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학생들과 중산층을 제외한 빈민들은 “민심교란 선동과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폭도” 또는 ‘불량배’로 규정되었고, “치안질서를 마비시키고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매도되었다.<sup>30)</sup>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을 학생들의 시위와 구분되는 ‘불량배’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불량배’ 일제 단속이 시작하였다. 서울시경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에 있는 폭력배 및 불량배를 대상으로 “하루 3천여 명씩 경찰력을 투입, 집중 단속”을 실행하였고,<sup>31)</sup> 대구와 광주에서도 “폭력·불량배 및 우범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었다.<sup>32)</sup> 치안본부의 일제 소탕령에 따라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서울,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폭력·불량배 등 우범자 4,207명이 검거되었다.<sup>33)</sup> 항쟁이 있었던 마산에서도 치안질서를 위해 “폭력우범자, 전과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22일부터 단속이 진행되었다.<sup>34)</sup> 부산에서는 박찬궁 부산지구계엄사령관이 상습폭력 조직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부산지검은 “상습폭력사범 특별수사부를 설치, 본격적인 소탕”에 들어갔다.<sup>35)</sup>

27) 『동아일보』, 1979년 10월 18일자.

28) 『경향신문』, 1979년 10월 18일자.

29) 『경향신문』, 1979년 10월 19일자.

30) 『동아일보』, 1979년 10월 18일자.

31) 『동아일보』, 1979년 10월 22일자.

32) 『동아일보』, 1979년 10월 23일자.

33) 『경향신문』, 1979년 10월 23일자.

34) 『동아일보』, 1979년 10월 23일자.

35) 『경향신문』, 1979년 10월 25일자.

‘불량배’나 ‘폭력배’라는 이름으로 실행한 대규모 단속은 그 대상이 학생이나 중산층 시민보다 빈민이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산시경은 부마항쟁을 분석하여 「79부마사태의 분석」이란 문서를 작성하였다.<sup>36)</sup> 이 문서에는 정치적 배경, 발생원인, 시가지 확산원인, 데모의 특이양상 등이 기록되었다. 이 가운데 ‘데모의 특이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야간 구분 없이 도시게릴라식 폭도화”, “경찰차량방화, 과출소, 언론기관, 관공서 등 습격”, “20세 전후 불량성향자 대학생가장 합세(때미리, 식당종업원, 공원, 구두땀이 등)” 등으로 적혀 있다. 부산시경은 항쟁에 참여한 빈민을 ‘불량성향자’로 규정하였고, 이들이 시위대에 합세하여 관공서와 언론사를 습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박정희 정권은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단속을 펼쳤던 것이다.

10·26 사건 이후 비상계엄령이 공포된 상태에서 최규하 정권 시기에도 불량배 단속은 계속되었다. 치안본부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10월 2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총 12,341명을 검거하였다.<sup>37)</sup> 대부분 유흥가, 사창가,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폭력배’라고 했다. 최규하 정권은 안정되고 명랑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폭력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하였다.<sup>38)</sup>

1980년 1월 17일 최규하 정권은 내무부와 법무부, 계엄사 합동으로 「사회기강 확립대책」이라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의 골자는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강도·절도·밀수·폭력·도범 등 5대 사회악을 중점적으로 소탕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며, 공직자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경제질서 교란사범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것이다.<sup>39)</sup>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

36) 부산시경, 「79부마사태의 분석」,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앞의 자료집, 1989, 71~72쪽 수록.

37) 『동아일보』, 1979년 12월 1일자.

38) 『경향신문』, 1979년 12월 1일자.

해서는 사회의 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그것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악에 대한 단속을 김종환 내무부 장관, 백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회성 계엄사령관의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것이었다.

「사회기강 확립대책」에 이어 이회성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강력범을 비롯한 도범, 폭력범, 밀수 및 도박행위 등 사회악을 중죄”하고,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폭리, 탈세, 등 악덕 모리배나 서민을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사치, 낭비, 퇴폐행위 등 생활 주변의 모든 불건전한 요소를 추방”하는 등 “민생안정과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시책을 마련”하여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하였다.<sup>40)</sup>

「사회기강 확립대책」과 계엄사의 담화문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단속과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이다. 부마항쟁 이후 단속은 대체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여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량배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량배도 대상이라며, 단속의 대상을 확장하였다. 두 번째는 ‘군·검·경찰 합동 단속’이다. 『동아일보』 1980년 1월 18일자 사설을 보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잔인한 강력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만 해도 일단 검거선봉에도 좀처럼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sup>41)</sup> 폭력배를 발본색원하여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결국은 경찰에 대한 불신,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군·검·경찰 합동 단속은 그동안 경찰의 일시적인 단속과 달리, 폭력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소탕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39) 『동아일보』, 1980년 1월 17일자.

4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8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상)』 2(약칭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 2007, 508쪽.

41) 『동아일보』, 1980년 1월 18일자.

계엄사령관의 발표 이후 「사회기강 확립대책」이 경찰에 하달되었고, 1월 21일부터 중요 범죄와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단속이 시작하였다.<sup>42)</sup> 2월에는 구정을 앞두고 각종 강력사범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이 있었으며,<sup>43)</sup> 최대의 조직폭력집단인 ‘양은파’도 적발하였다.<sup>44)</sup> 3월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폭력배 및 학생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아쉽다”며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sup>45)</sup> 이에 따라 3월 28일 제21차 계엄위원회에서 ‘사회안녕질서 저해사범 일제 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서정화 내무부 차관은 “강력범의 사회격리를 위한 강제노동이나 강제수용 등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직폭력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깡패의 소탕을 위해” 계엄사에 지원을 요청하였다.<sup>46)</sup> 4월에는 경찰이 행락철로 인해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 달 간 폭력·치기배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하였다.<sup>47)</sup>

부마항쟁 이후 박정희·최규하 정권이 ‘사회기강’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혼란을 불량배 탓이라고 규정하며 단속을 계속했던 것은 4월혁명의 경험 때문이었다. 김재규는 「항소이유보충서」에서 “4·19와 같은 사태는 눈앞에 다가왔고, 아니 부산에서 이미 4·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였다.<sup>48)</sup> 부마항쟁은 4월혁명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4월혁명은 대학생들이 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항쟁에 폭발력을 부여하는 데에는 빈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4월혁명 과정에서 마산지역의 1, 2차 항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산의 빈민들은 1960년 3월 15일 1차 마산항쟁과 4월 11일 2차 마산항쟁에서

42)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IV, 삼신인쇄, 1994, 718쪽.

43) 『동아일보』, 1980년 2월 4일자.

44) 『동아일보』, 1980년 2월 13일자.

45) 『동아일보』, 1980년 3월 15일자.

46)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 2007, 508쪽

47) 『경향신문』, 1980년 4월 3일자.

48)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앞의 책, 1984, 858~860쪽 수록.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항쟁을 폭력화하는 한편, 이른바 ‘등화관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sup>49)</sup> 약 20년이 지나서도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나타났다. 1979년 10월 18일과 19일 마산의 빈민들은 불이 켜진 상점이나 사무실, 민가에 돌맹이를 던지면서 강제로 소등시켰다. 또한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헤드라이트를 박살내기도 하였다.<sup>50)</sup> ‘등화관제’를 강요하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저항하는 방식이 재연된 것이다. 마산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저항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지역의 빈민들 나름의 시위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라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박정희·최규하 정권은 빈민이 항쟁에 참여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확산된다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4월혁명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빈민을 단속했던 것은 빈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 2. 5·18 광주항쟁과 불량배·깡패 단속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에 저항하는 항쟁이 발생하였다. 항쟁은 대학생들이 시작하였지만, 점차 시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공수부대의 진압이 강경해지고 항쟁이 고조될수록 노동자와 무직자 등 빈민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5·18 광주항쟁은 부마항쟁과 유사하게 학생 시위가 도화선

49) 오제연,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147~149쪽.

5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앞의 책, 2009, 343쪽; 박영주,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항쟁 자료집』, 1989, 282~298쪽.

이 되었지만, 빈민을 중심으로 한 항쟁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항쟁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빈민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시민군의 구성과 취재 기자들의 대화, 계엄사와 육군본부의 발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5월 21일 조직된 시민군은 크게 학생시위나 군중집회 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핵심 대학생층, 스피커로 연설하거나 온갖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행동대원, 그리고 다양한 빈민들로 구성되어 있다.<sup>51)</sup> 여기서 빈민이란 구체적으로 신문팔이, 구두닦이, 술집이나 식당 종업원, 행상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실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소총을 들거나 지프를 운전하는 등 항쟁에서 최일선 무장 행동대원 역할을 맡았다.<sup>52)</sup>

전두환 정권 시기 검찰이 작성한 「광주사태 공소장」은 시민군 ‘기동타격대’로 활동을 하다가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sup>53)</sup> 기동타격대는 26일 도청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직한 유일한 시민군 조직으로, 시민군의 핵심이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조직이었다.<sup>54)</sup> 기동타격대 출신의 피검거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광주사태 공소장」 ‘기동타격대’ 인적 구성

이름 (나이)	직업	이름 (나이)	직업
윤석무(19)	실내장식	이재호(33)	군인
이재춘(20)	샷슈공	양기남(19)	양복점 종업원
임성택(16)	양화공	구성희(16)	식당 종업원
오정호(33)	상업	박승열(20)	양화공

51) 안종철, 「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20, 한국동북아학회, 2001, 292쪽.

52) 안종철, 위의 글, 2001, 293쪽.

53) 「광주사태 공소장」,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2』, 사계절, 1984, 943~992쪽 수록.

54) 안종철, 위의 글, 2001, 287쪽.

박명국(18)	전과사 종업원	김삼규(17)	도자기공
박영수(18)	목공	안성옥(17)	재수생
김두진(19)	타이루공	정광호(20)	다방 종업원
염동유(23)	차량조수	이성주(18)	나전칠기사
김공휴(17)	샷슈공	남승우(19)	식당 종업원
도준식(23)	농업	남영관(18)	목공
박홍식(21)	학생	김기광(18)	무직
박인수(17)	응접공	김여수(20)	가구공
나일성(18)	석공	김태찬(19)	노동
김행남(16)	학생	김재귀(16)	자개공
염용섭(19)	양화공	장승희(19)	양화공

\* 출처: 「광주사태 공소장」,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2, 사계절, 1984, 970~972쪽.

총 30명의 피검거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 재수생 1명, 군인 1명, 무직자 1명을 제외하고 전부 노동자와 종업원들이다. 또한 나이는 대체로 10대에서 20대 사이로 젊은 층이다. 시민군의 핵심 조직에서 피검거자의 구성이 노동자와 종업원 등 빈민이 많았다는 것은 시민군에서 이들 빈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경향신문』 기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빈민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들은 “20일 밤과 21일 새벽 사이에 MBC와 KBS가 전소”되었으며, “10여 개의 파출소가 파손됐는가 하면 시청, 도청 등 주요 관공서 건물은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고, “세무서만이 방화”되었다고 하였다. 시위대는 “옷차림도 각양각색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배” 같았다고 하였다.<sup>55)</sup>

시위대의 상당수가 ‘불량배’ 같았다고 한 것은 시위대의 주체가 대체로 중

55) 『경향신문』, 1980년 5월 29일자.

산층 시민이나 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 시민이나 학생들과는 다르게 빈민의 투쟁 형태는 적대적인 동시에 폭력적이다.<sup>56)</sup> 따라서 부마항쟁과 유사하게 시청, 파출소,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과 MBC나 KBS와 같은 언론기관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은 빈민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계엄사는 5·18 광주항쟁을 진압한 뒤 5월 31일에 「광주사태」라는 글을 발표하였다.<sup>57)</sup> 항쟁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학생들은 전체 인원의 30%”에 불과하며, “불량배나 특정 정치목적을 가진 불순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엄사는 학생이나 지식인층이 아니면 ‘불량배’나 ‘불순분자’로 봤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피검거자 730명의 직업별 현황을 밝히고 있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 「광주사태」 피검거자의 직업별 현황

직업	학생	무직	공원	노동자	운전자	농업	상업	점원	회사원	기타	총인원
인원	153	126	83	79	55	47	47	44	37	59	730
%	21.0	17.2	11.4	11.0	7.5	6.4	6.4	6.0	5.0	8.1	100

\* 출처: 「계엄사 발표 「광주사태」 전문」,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2, 사계절, 1984, 942쪽.

학생들은 21%로 비중이 적은 반면, 무직자와 공원, 노동자, 운전자, 점원 등 빈민은 총 387명으로 53.1%를 차지한다. 계엄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힌 ‘불량배’나 ‘불순분자’는 빈민이었고, 이들이 항쟁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6)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앞의 책, 1985, 68쪽.

57) 「계엄사 발표 「광주사태」 전문」,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2, 사계절, 1984, 941~942쪽 수록.

한편 1980년 6월에 육군본부는 「광주사태의 진상」이라는 글을 발표했다.<sup>58)</sup> 이 글에서도 “광주난동 소요사태로 당국에 연행한” 730명의 인적 구성을 밝히고 있다. “무직이 126명으로 전체의 17%”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비공 등 공원이 83명”으로 많다고 하였다. “중·고생은 129명으로 약 18%”에 지나지 않지만, “날품팔이 등 노동자가 79명, 녀마주이가 15명”이냐 된다고 강조하였다. 육군본부도 항쟁에서 공원과 무직자, 녀마주이 등 “불만 계층” 또는 “시중 깡패”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이 항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신군부는 빈민을 “현실불만세력”<sup>59)</sup>이나 “폭도”<sup>60)</sup> 등 ‘불량배’로 규정하여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여기서 폭도란 단순히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sup>61)</sup> 빈민은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불만세력’으로서, 기회가 되면 그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시키는 ‘폭도’로서 표상되었던 것이다. 신군부는 빈민을 사회 안정과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불량배’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압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빈민을 학생과 중산층 시민들과 구분을 지음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배제하려 하였다.

신군부가 빈민을 불량배로 매도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마항쟁과 같이 광주에서도 학생과 중산층 시민, 빈민은 일체가 되어 항쟁을 했지만, 군대를 도시 밖으로 완전히 내몰고 자치 권력을 형성한 것은 차이가 있었다.<sup>62)</sup> 신군부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항쟁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서울까지 이러한

58) 「육군본부의 광주사태의 진상」, 광주항쟁진상조사특별위원회 통일민주당,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1988, 64-76쪽 수록.

59) 『경향신문』, 1980년 5월 21일자.

60) 『경향신문』, 1980년 5월 25일자.

61)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82쪽.

62)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 2005, 313쪽.

항쟁이 확산된다면, 신군부의 집권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마항쟁 때와 마찬가지로 5·18 광주항쟁 직후에도 불량배 단속이 실행되었다. 항쟁이 발생한 다음날인 5월 19일에 오탁근 검찰총장은 “국가비상사태 하의 중요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근 학생 시위 등으로 말미암은 국가의 위기와 사회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녕과 국민생활 및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 등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말하였다.<sup>63)</sup> 이에 따라 서울시경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차기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사의 경호원 및 이에 추종하는 폭력전과자”, “지역별 선후배 등 폭력전과자 등으로 조직돼 유흥업소 등을 무대로 날뛰 조직폭력배”, “다방, 식당, 술집 등의 폭력전과자”, “학원 주변의 등하교생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퇴학생”, “카바레에 상주하면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공간제비족”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쳤다.<sup>64)</sup> 또한 서울시경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영세민 갈취”, “공해사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소탕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sup>65)</sup>

1980년 7월 1일에는 경찰이 고질적 사회극악사범인 조직적 상습폭력배 및 치기배와 퇴폐사범을 소탕하기 위해 한 달 간 ‘사회극악사범 특별검거’ 기간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31일까지 검거된 사람 수는 조직 상습폭력배 14,100명과 퇴폐사범 205명으로 무려 14,305명이었다.<sup>66)</sup> 1만여 명이 넘는 폭력배들이 삼청교육대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거된 것이었다.

최정운은 오랫동안 “독재와 민주화의 정치적 대결은 군부와 대학생들”만의 문제였고, “시민들은 정치적인 투쟁에 그저 방관하는 자세”였으며, “테모를 진압하는 경찰들도 시민들은 일체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였다.<sup>67)</sup> 그러나

63) 『경향신문』, 1980년 5월 19일자.

64) 『동아일보』, 1980년 6월 3일자.

65) 『동아일보』, 1980년 6월 20일자.

66)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4, 718쪽.

67) 최정운, 앞의 책, 2012, 193쪽.

부마항쟁과 5·18 광주항쟁에서 나타나듯이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특히 빈민들에게도 가차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군부의 상대는 더 이상 대학생만이 아니게 된 것이었다.

군사정권의 태도와 관련해서 최정운은 “군부가 민중의 정치적 위험성과 잠재적 힘을 가장 먼저 간파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sup>68)</sup> 빈민은 잘 드러나거나 학생처럼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항쟁 과정에서 저항의 폭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모든 빈민이 군사정권에 저항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빈민들을 잠재적으로 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항쟁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한편, 빈민들의 저항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들을 ‘불량배’로 몰아가며 단속했던 것이다.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강제 연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되고 준비되었던 것이다.

---

68) 최정운, 앞의 책, 2012, 193쪽.

### Ⅲ. 삼청교육대 강제연행의 기획과 실행

#### 1. ‘삼청계획 5호’의 입안 과정

1980년 5월 31일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행정·사법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출범하였다.<sup>69)</sup> 국보위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 업무를 담당한 정부 안의 정부였다.<sup>70)</sup> 실질적으로 국보위의 모든 실권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두환이 쥐고 있었다. 국보위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집권 기반이었다.

상임위원회 산하에는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사회정화분과위원회였다. 신군부는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잠재적 저항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삼청계획’이라 불리는 일련의 사회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삼청계획’은 총 5호까지 있는데, 1호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2호는 정치 비리자 척결, 3호는 고급 공무원 숙정, 4호는 3급 이하 공무원 숙정, 5호는 불량배 소탕을 목표로 하였다.<sup>71)</sup> 정치인과 공무원을 정화한 다음 국보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정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삼청교육대’ 사업이라고 부르는 ‘삼청계획 5호’의 실행이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1980년 8월 4일 국보위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이어서 계엄사가 ‘계엄포고 제13호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입안은 그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1980년 6월 12일 최규하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규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질서와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6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1980, 9쪽.

70) 임상혁, 앞의 글, 2002, 77쪽.

71) 계엄사편찬위원회, 『계엄사』, 육군본부, 1982, 586쪽.

거듭 강조하였다.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해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를 불용하고,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서정쇄신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각종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일반 사회의 정화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sup>72)</sup>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나 군·검 합동 단속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정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악 제거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이 사회정화운동 차원에서 실행된 것으로 볼 때, 이 담화문으로부터 사업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지침이 발표되자, 국보위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여론청취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방침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였다.<sup>73)</sup> 국보위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목표 네 가지와 사회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기본 목표 중 네 번째 항인 “부정부패, 부조리 및 각종 사회악의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것과 후자의 문제점 중 여덟 번째 항인 “밀수, 마약, 폭력, 부정식품, 강력범 등 각종 사회악을 근절시켜 사회정화를 이룩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4)</sup> 국보위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악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삼청교육대 사업이 기획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형사계 관리반장을 맡았던 김형우는 “1980년 6월 중순 관내 17개동에 있는 불량배와 파렴치범, 사기범에 대한 자료를 보름 안에 수집하라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서별로 삼청교육대 대상자 검거 인원을 책정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였다.<sup>75)</sup>

72) 『경향신문』, 1980년 6월 12일자.

73) 『동아일보』, 1980년 6월 13일자.

7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1980, 16쪽.

75) 김형우, 「삼청교육대 공 세운 전직 경찰관의 참회록」, 『신동아』 8월호, 2011.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가 출범한 이후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국보위의 사회개혁 방침을 통해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보위는 사회개혁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 뒤 6월 17일 국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하였다.<sup>76)</sup> 1988년 이른바 ‘제5공 청문회’에서 1980년 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와 사회정화분과위원회 간사 위원이었던 허삼수는 불량배 소탕을 요구하는 민원과 건의가 민원실에 많이 들어와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sup>77)</sup> 국보위는 1980년 7월 24일까지 8,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였는데, 행정처분 시정 요구가 1,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견개선, 정책건의, 공직자 부조리 고발, 개인적인 요구사항, 사회의 부조리 고발, 개인 간의 문제 순이었다.<sup>78)</sup> 특히 사회악 소탕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개인적인 요구사항 587건(7%), 사회의 부조리 고발 582건(6.9%), 개인 간의 문제 525건(6.2%)인데, 총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민원 때문에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는 민원은 단순히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용일 뿐이었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령과 5·18 광주항쟁의 강경한 진압으로 한국 사회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장한 군경이 길거리 곳곳을 다니며 검문하고, 상습적으로 불량배 단속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불량배나 폭력배가 사고를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경찰은 폭력배를 비롯한 각종 단속을 실행하였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회극악사범을 소탕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였다.<sup>79)</sup> 또한 일부 자가용 승용차들이 “비상라이트, 무전안테나 등을

76) 『동아일보』, 1980년 6월 17일자.

77)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1989년 2월 9일, 김만기, 허삼수 증언.

78) 『동아일보』, 1980년 7월 24일자.

불법으로 달고 다니면서 수사기관 차량으로 위장,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특수차량행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행할 것이며,<sup>80)</sup> 7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부정식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부정식품, 불량식품 등을 단속하겠다고 하였다.<sup>81)</sup> 21일부터는 “카바레, 바, 나이트클럽, 일식집 등이 퇴폐적인 음락행위를 하거나 바가지요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sup>82)</sup>

신문에서도 7월부터 각종 폭력배에 의한 사건사고가 보도되었다. “손님들을 갖가지 수법으로 유인하여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sup>83)</sup> “강제로 술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값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마구 때렸다”<sup>84)</sup>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문제가 보도되었다. 또한 서울에서 “사채폭력단 두목 이철현과 권투선수였던 우광식 등 2명”이 “빚을 대신 받아주기로 계약”하여 “채무자 동생 이성태를 집단 구타”를 가하는 사건도 있었고,<sup>85)</sup> 부산에서 “건축공사 입찰현장을 돌아다니며 낙찰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온 경제깡패 두목 박홍섭”이 구속되는 사건<sup>86)</sup> 등 경제깡패에 대한 문제도 신문에 나타났다. 이밖에도 “소형화물트럭이나 리어카를 이용한 행상들이 앰프시설을 갖춘 마이크나 휴대용 확성기, 카세트 녹음기를 사용”하여 “주택가에 새로운 소음공해”가 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들과 다툼”이 생긴다면서 행상의 문제점도 보도되었다.<sup>87)</sup>

신문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폭력 사건이었다. “서울역 주변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주먹을 휘둘러 온 떠돌이 10대 8명”이 구속되어 군재에 넘겨졌

79)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4, 718쪽.

80) 『동아일보』, 1980년 7월 7일자.

81) 『경향신문』, 1980년 7월 11일자.

82) 『경향신문』, 1980년 7월 21일자.

83) 『경향신문』, 1980년 7월 5일자.

84) 『경향신문』, 1980년 7월 8일자.

85) 『경향신문』, 1980년 7월 18일자.

86) 『동아일보』, 1980년 7월 18일자.

87) 『동아일보』, 1980년 7월 19일자.

는데, 경찰은 “최근 상습폭력배 일제 단속에서 죄질이 아주 나쁜 패거리”였기 때문에 군재로 넘긴 것이라고 하였다.<sup>88)</sup> 또한 “호텔과 카바레 등 무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유부녀를 농락한 후 금품을 빼앗아 온 조직폭력배 ‘하마파’ 두목 임상천 등 일당 4명”이 군재에 넘겨지기도 했다.<sup>89)</sup> “10대 청소년들”이 피서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강도를 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도 보도되었다.<sup>90)</sup> 또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교폭력서클 ‘백경파’ 15명과 동네 불량배 서클 ‘팔통파’ 3명”이 구속되었는데, “종로 창신동 일대 유흥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30명씩 떼 지어 각목, 유리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4차례에 걸쳐 집 단편싸움”을 벌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줬기 때문이었다.<sup>91)</sup> 10대 청소년의 비행뿐만 아니라 폭력사건도 강조하였다.

삼청교육대 사업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7월부터 경찰은 폭력배를 비롯한 각종 단속을 실행하였다. 또한 신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경제깡패, 행상 소음, 폭력사건, 10대 폭력배 문제 등이 보도되었다. 사전에 여론을 조성하여 앞으로 추진할 삼청교육대 사업의 명분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국보위는 민원실과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폭력배 검거 작전을 실행하는 한편, 7월 29일 「불량배 소탕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sup>92)</sup> 이 문서는 삼청교육대 사업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로 현재 초안이 남아 있어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삼청계획 5호의 목적, 소탕 대상, 시행 방침, 검거 및 분류, 순화교육, 취로 사업, 지역 추진위원회 편성운영, 각 부서별 업무분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보위는 「불량배 소탕계획」을 바탕으로 삼청교육대 사업을 시작하였다.

88) 『동아일보』, 1980년 7월 9일자.

89) 『동아일보』, 1980년 7월 12일자.

90) 『경향신문』, 1980년 7월 18일자.

91) 『경향신문』, 1980년 7월 29일자.

9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불량배 소탕계획(초안)」, 1980년 7월 29일자.

## 2. 강제연행과 장기구금

삼청교육대 사업은 공식적으로 1980년 8월 4일에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불량배’ 강제연행은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7월 29일 국보위가 작성한 「불량배 소탕계획」에 근거하여 계엄사는 7월 30일 「불량배 소탕, 순화 준비지침」이라는 전문을 각 계엄사무소장에 보냈다. “1980. 8. 1.부터 일제 검거 및 수용하고, 8. 4.부터 순화교육 개시”, “불량배 수용 및 순화교육 예상인원 20,022명은 전국 25개 사단에 분산 배치하여 침식준비 및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이였다.<sup>93)</sup> 8월 4일 계엄사의 포고령은 단순히 사회악에 대한 검거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르면, 불량배 일제 검거의 대상은 강도, 절도, 치기 배를 포함한 폭력사범, 서민 착취배를 포함한 공갈 및 사기사범, 밀수, 마약, 상습 도박자를 포함한 사회풍토 문란사범이다.<sup>94)</sup> 그러나 국보위에서는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와 ‘불건전한 생활영위자’ 등도 해당된다고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이 삼청교육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sup>95)</sup> 군과 경찰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제히 불량배 소탕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강제연행 과정에서 각종 범죄자들이 잡혀가기도 했으나, 일제히 소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고한 사람들도 연행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인 1981년 1월 24일까지 5차에 걸쳐 총 60,755명이 검거되었는데,<sup>96)</sup> 그 중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35.9%로 무려 21,869명이나 되었다.<sup>97)</sup> 그들은 전과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9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 2007, 517쪽.

94) 『동아일보』, 1980년 8월 4일자.

9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1980, 40~41쪽.

96) 계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2, 586쪽.

97) 계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82, 589쪽.

하고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 “불량배”,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보내졌던 것이다.

계엄사는 초기 검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 평가를 하였는데, “명단 작성 과정에서 주모자급 탈락”, “검거 과정에서 실적위주 경향”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sup>98)</sup> 또한 후일 1997년 11월에 전·현직 경찰관 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가짜로 전과 기록을 만들어 시민을 삼청교육대로 보냈기 때문이었다.<sup>99)</sup> 이와 같은 사실은 ‘불량배’를 일소하겠다는 거창한 목표와 달리, 인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검거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량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연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청교육 피해자(이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근길에 불심검문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sup>100)</sup> 동네 사람과 다투었다는 이유로,<sup>101)</sup> 제사 후 식사 도중에 갑자기,<sup>102)</sup> 부산열차에서 야쿠르트와 박카스 장사를 하는 도중에,<sup>103)</sup> 갑자기 동교동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sup>104)</sup>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sup>105)</sup> 잠자던 중 어린이 대공원 후문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sup>106)</sup> 형수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가 주위의 신고<sup>107)</sup>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량배’로 낙인찍혀 강제로 연행되었지만 그들은 왜 잡혀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분류심사를 받는 도중에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는 도중에도, 심지어 퇴소할 때조차 왜 잡혀왔는지 이유를 알지

---

98)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2007, 528쪽.

99) 『한겨레신문』, 1997년 11월 15일자.

100) 류영근, 「죽음의 지옥생활 ‘삼청교육’」, 『한민중』 11월호, 1988(1), 19쪽.

101) 아들 강영희 사망, 어머니 신순자 신고, 「강원도 삼청교육 관련자 사망 신고서」, 1989

102) 남편 김광주 사망, 아내 김부칠 신고, 「강원도 삼청교육 관련자 사망 신고서」, 1989

103) 「한병주 자술서」

104) 「김태효 자술서」

105) 「이수영 사유서」, 아들 이상규가 작성.

106) 최희석 사례, 「내가 겪은 삼청교육대」, 『닝마』 3호, 1987, 26쪽.

107) 김형진 사례, 「내가 겪은 삼청교육대」, 『닝마』 3호, 1987, 26쪽.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분류심사는 피해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급이 판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초에서 1분 사이였고, 길어도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sup>108)</sup> 심지어 심사위원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09)</sup> 피해자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정되는지, 왜 그 등급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혐의에 대한 변론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sup>110)</sup> 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A에서 D급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충북 지역 경찰서의 「분류조사표(신상카드)」 두 개가 남아 있어 분류 심사의 실체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sup>111)</sup> 양면으로 된 한 장짜리의 문서로, 앞면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 기초적인 신상 정보와 전과기록, 인상특징, 성행(性行), 배후·공범·교제인물, 조직계보, 개전의 정 유무 등을 기록할 공간이 있다. 하단에는 범죄 또는 비행개요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뒷면에는 좌우 10개의 지문과 심사의견, 그리고 최종등급판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앞면에 기록된 개인신상정보와 범죄의 내용 등을 보고, 각자가 판단하여 뒷면에 등급을 매기고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단순히 A, B, C, D로 분류된 공간에 기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김형우의 회고록에 따르면, 심사 절차는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관리주임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고, 피해자가 “심사대 앞에 서면 수사관이 질문”하였다. “보안대 수사관이 A, B, C, D 네 등급 중

108) 장의덕, 「제2의 광주학살. 삼청교육」, 『엔터프라이즈』 11월호, 1988, 173쪽.

109) 이강춘, 『삼청교육 5호작전』, 두풍, 1988, 96쪽.

110) 류영근, 「우리는 정권탄생의 제물이었다」, 『엔터프라이즈』 8월호, 1988(2), 411쪽; 윤일웅, 「삼청교육대 그 비극의 전말」, 『월간조선』 11월호, 1988, 312~313쪽.

111) 충북 지역 경찰서, 「분류조사표(신상카드)」, 1980

하나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같은 등급에 사인을 했다”고 한다.<sup>112)</sup> 국보위는 최대한으로 공정성을 보장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제로 분류한다고 하였지만,<sup>113)</sup> 실제로는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심사 과정에는 지역 유지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정화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 그들은 억울한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저 정부의 조치가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였다.<sup>114)</sup>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A급을 받으면 군 재판소에, D급을 받으면 혼방되었다. B급과 C급을 받은 사람들은 군부대에 인계되어 순화교육을 받으며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B급과 C급으로 판정된 40,347명 가운데 환자 605명을 제외한 39,742명은 군부대로 가서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았다.<sup>115)</sup> 군 당국은 그들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개과천선시켜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순화교육을 했다고 주장하였다.<sup>116)</sup> 숙식은 물론 목욕, 이발, 치료 등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배려해주었으며, 일부 부대에서는 기간장병을 천막에 수용하고 영구막사시설에 순화교육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에 집중했다고 하였다.<sup>117)</sup> 그러나 피해자들은 군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강제로 삭발 당한 채 군복으로 갈아입고 기본교육을 받았다.<sup>118)</sup> 이름만 교육이었지 실상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구타와 기함의 연속이었고, 거듭되는 가혹행위 속에서 피해자들은 육체적 시련을 감당해야만 했다.

---

112) 김형우, 앞의 글, 2011.

11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1980, 41쪽.

114) 윤일웅, 앞의 글, 1988, 312쪽.

115) 계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2, 591쪽.

116) 국방부, 「삼청교육 실태 보고(씨나리오)」, 1988년 10월 5일자.

117) 계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82, 596쪽.

118) 윤일웅, 위의 글, 1988, 313쪽.

피해자들은 4주간의 순화교육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80년 9월 8일 1단계 순화교육을 마친 자 가운데 B급으로 재분류된 5,766명을 비롯하여 총 9차례에 걸쳐 10,016명은 다시 전방 부대 수용되어 6개월 간 근로봉사를 해야만 했다.<sup>119)</sup> 근로봉사는 형식적으로 자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B급으로 재분류된 사람들 앞에 ‘삼청근로봉사대 자원서’라는 용지가 날아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방에서 근로봉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였다.<sup>120)</sup> 그 누구도 자원서에 손도장을 찍으려 하지 않았지만, 군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날인을 하였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sup>121)</sup>

군 당국은 피해자들이 아직 “개과천선”하지 않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대해 “반성과 회개로 개과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로봉사를 실행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22)</sup>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개과천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명목일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근로봉사에서 전차기동진지 구축, 전투진지 공사, 전술도로 신설 및 확장, 통신선 매설 등 각종 군 시설 작업에 동원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건설 사업에 노동력을 동원하고, 병역 기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국토건설단 사업을 실행하였다.<sup>123)</sup> 이 사업에는 깡패나 불량배뿐만 아니라 고학력자와 직장인 등도 많았다. 박정희 정권은 그들을 건설 사업에 동원함으로써 노동규율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청교육대 사업의 근로봉사는 경제개발이나 노동규율의 확립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노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군부대를 위한 봉사만을 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

---

119) 계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2, 602쪽.

120) 윤일웅, 앞의 글, 1988, 315~316쪽.

121) 류영근, 앞의 글, 1988(1), 19쪽.

122) 계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82, 601쪽.

123) 한규한, 앞의 글, 2015, 385쪽.

에서도 순화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면 해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1981년 1월 25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 전 재심사하여 퇴소된 사람을 제외한 총 7,578명에게 1~5년의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계엄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악 일소와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12월 18일 정부가 제정 공포한 사회보호법 때문이었다.<sup>124)</sup> 보호감호 처분의 법률적 근거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인데, 계엄포고 제13호로 삼청교육대에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가 판단, 심사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125)</sup> 특히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에 1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심사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하루 평균 300명을 심사했다는 것인데, 단순하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감호 처분은 단순히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조차 빼앗은 것이었다. 그들은 1981년 12월 청송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군부대에 수용되었다. 군 당국은 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군 실정에 맞게 그들을 관리하였는데, 이전과 같이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근로에 종사시키며, 정신교육과 체력단련 등 순화교육을 지속하였다고 하였다.<sup>126)</sup> 보호감호란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sup>127)</sup> 그러나 군부대는 그들을 교화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으며, 군인들 또한 그들에게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124) 계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2, 603쪽.

125) 임상혁, 앞의 글, 2002, 88쪽.

126) 계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82, 604쪽.

127) 임상혁, 위의 글, 2002, 87쪽.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다. 군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들에게 구타와 기합을 가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강제 연행된 총 60,755명 가운데 B급과 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은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중에서도 자원서라는 방식을 통해 10,016명이 6개월간의 근로봉사를 해야만 했다. 또한 사회보호법으로 절반이 넘는 7,578명이 1~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피해자들은 짧게는 4주, 길게는 5년 이상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다.

신군부는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연행되면서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한 국가와 신군부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을 일거에 퇴소시킨다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군부는 순화교육뿐만 아니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를 실행하면서 그들의 퇴소를 미루려 했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불량배’를 갱생, 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 등 폭력을 가하는 것만 있었다. ‘불량배’를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시킨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미루고자 사회보호법을 통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사업은 갱생과 선도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감금, 격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IV. 불량배 낙인찍기와 정치·사회적 효과

### 1.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

계엄사는 삼청교육대 피연행자들을 ‘불량배’로 규정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잠재적 범죄자’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계엄사가 스스로 제시한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계엄사는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연행한 총 60,755명 가운데 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53,581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다.<sup>128)</sup> 검거된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전체 인원의 90%가 범죄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엄사가 제시한 통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21,869명으로 35.9%를 차지한다. 계엄사가 작성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129)</sup>

< 표 4 >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과 현황

구 분	전과無	초범	재범	3범	4범	5범 이상
인원수	21,869	13,525	9,820	6,327	4,237	4,977
%	35.9	22.3	16.2	10.4	7	8.2

\* 출전: 계엄사편찬위원회, 『계엄사』, 육군본부, 1982, 588쪽.

계엄사는 전과자의 비율이 64.1%나 차지한다고 강조할 뿐, 전과가 전혀 없는 21,869명이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전체의 3분의 1이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는 폭력사범

128) 계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2, 588쪽.

129) 계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82, 589쪽.

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7년 경찰관 2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일반 시민을 전과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삼청교육대로 보냈기 때문이었다.<sup>130)</sup> 이러한 사실을 보면 초범 13,525명 가운데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가 제시한 통계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사는 피연행자의 신체적 특징을 부각시키며 ‘불량배’로 몰아갔다. <표 4>는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신체적 특징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sup>131)</sup>

< 표 5 > 강제연행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구 분	문신	자상	불구	기타	정상
인원수	9,041	6,749	423	5,897	38,545
%	14.9	11.1	0.7	9.7	63.6

\* 출전: 계엄사편찬위원회, 『계엄사』, 육군본부, 1982, 590쪽.

계엄사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26%나 된다고 강조할 뿐이다. 문신이나 흉터가 있다고 그들 모두를 불량배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계엄사는 문신과 흉터를 부각시키며 이들을 비정상적이고 불량배인 것처럼 몰고 갔다. 특히 0.7%에 불과하지만 불구자 4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삼청교육대 사업을 주관한 사람들의 인권 의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계엄사는 자신이 제시한 통계로 보아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었다.

130) 『한겨레신문』, 1997년 11월 15일자.

131) 계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2, 590쪽.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삼청교육대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에는 ‘제5공 청문회’ 당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즉 B급과 C급으로 판정되어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직업별 현황이 나와 있다.<sup>132)</sup>

< 표 6 > 검거자 B·C급 직업별 현황

직업	인원	%	직업	인원	%
계	39,786				
건축업	169	0.42	석공	35	0.08
공원	2,967	7.45	공업	2,562	6.43
교원(교수포함)	13	0.03	공무원	32	0.08
녕마주이	593	1.49	농업	2,535	6.37
부동산소개업	129	0.32	감독감시원	104	0.26
종교인(점술가)	41	0.10	술집종업원	896	2.25
축산업	55	0.13	어업	165	0.41
학생	1,309	3.29	체육	7	0.01
양화업(직공포함)	161	0.40	편물봉제(직공포함)	159	0.39
행상	712	1.78	판매업	114	0.28
상업	2,703	6.79	사업	3,329	8.36
선박업(선원포함)	48	0.12	수산업	14	0.03
인쇄·출판	68	0.17	신문보급소(배달포함)	48	0.12
요식(술집)	309	0.77	여관(하숙)	79	0.19
의사	7	0.01	언론인	35	0.08
요리사	120	0.30	약사	3	0.01

13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 2007, 527쪽.

점원	237	0.59	이미용업	132	0.33
검(신문포함)팔이	24	0.06	광산(광부포함)	200	0.52
무직	1,430	3.59	노동자	3,698	9.29
기타	14,444	36.30	보일러공	100	0.25

\* 출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8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상)』 2, 2007, 527쪽.

\*\* %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기록하였음. 약사 3명은 소수점 두 자리로 할 경우 0.00이 되어 0.007을 반올림 하여 0.01로 기록하였음.

이 가운데 교수 13명, 언론인 35명, 공무원 32명, 의사 7명, 약사 3명 등 지식인이나 중산층 시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0.22%였고, 학생은 1,309명(3.29%)이나 되었다. 그런데 전체의 7.45%로 2,967명이나 되는 공원들은 순화교육으로 피해를 보았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노동운동을 한 민주노조 관계자들이었다.

1980년 8월 당시 신진벨브 노동조합 조합장이었던 문장언은 회사와 경찰이 자신을 제거할 목적으로 야합하여 “8월 7일 삼청교육대로 보내고 같은 해 10월 해고조치”를 했으며, “원풍모방, 한일도루코, 남영나이론, 면목버스, 태양금속, 원풍농기구, 무궁화메리야스, 롯데제과 등 8개 회사 노조간부 및 노조원 17명”은 보안사와 합수부가 “강제사표를 쓰게 하여 생존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로” 보냈다고 하였다.<sup>133)</sup> 당시 한일공업 지부장이었던 이기창도 1980년 12월 8일에 “합수사 수사요원 군인 2명에게” 잡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었다고 하였다.<sup>134)</sup>

1981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에서 노동관계를 비롯한 당면한 문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sup>135)</sup> 노동조합 간부 및 근로자 70여 명이 당국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 중 11명이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하

133) 문장언, 「삼청교육생 복직 관련 진정서」, 1989

134) 이기창, 「순화교육 체험기」, 『민주노동』 5월호, 1984, 4~5쪽.

135)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노동문제의 현안에 대한 보고서」, 1981.

였다. 특히 이 문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근로자들이 단순한 폭력배로 취급되어 군부대로 인계”되었다는 것과 “노동운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폭력배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군부는 노동운동을 하는 공원들을 ‘폭력배’나 ‘불량배’로 여겼고,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삼청교육대 사업을 활용한 것이었다.

공원 외에도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노동자 3,698명(9.29%), 무직자 1,430명(3.59%), 술집종업원 896명(2.25%), 녁마주이 593명(1.49%), 껌·신문팔이 24명(0.06%) 등 빈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총 6,641명으로 전체의 16.6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녁마공동체에서 발간한 『녕마』라는 잡지를 보면,<sup>136)</sup> 녁마주이들이 삼청교육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겪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녕마주이들은 처음에 “불량배, 사기꾼, 정치깡패, 강·절도 상습범 등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던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로 가는 줄 알았다고 하였다.<sup>137)</sup> ‘불량배’를 일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삼청교육대로 연행되어 그곳의 실상을 본 직후 “녕마주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였으며, 공사관의 건축노동자와 같이 허름한 작업복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비틀걸음만 해도”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38)</sup> 그들은 녁마주이라는 이유로 연행되었다는 사실과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녕마주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치동 은마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녁마주이 생활을 하던 최희석은 8월 31일 잠자던 도중에 “공수부대 2명과 방법 2명”이 찾아와 “어린이 대공원 후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여 연행했다고 하였다. 군부대에 가서 보니 “떡쟁이(녕마주이)는 싹쓸이 된 듯” 했고,

---

136) 녁마공동체, 『녕마』 12월호, 1987

137) 「내가 겪은 삼청교육대」, 『녕마』 3호, 1987, 25쪽.

138) 위의 글, 『녕마』 3호, 1987, 28쪽.

“하나같이 재산이 없고 힘없는 영세민 아니면 구두담이, 녀마주이, 꺾팔이, 신문팔이, 노동자들”이 들어왔다고 하였다.<sup>139)</sup> 안양에서 벽돌운반공사를 하고 있던 김차균도 친구랑 술 마시던 중 “친구 부인과 언쟁이 붙었다가 경찰의 신고”로 잡혀갔고, “폭력 전과가 있다고 하여 B급으로 분류”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sup>140)</sup>

<표 6>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녀마주이가 593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희석과 김차균과 같은 녀마주이의 사례는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녕마』에는 1980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녀마주이들의 공동체인 “재건대의 막사를 포위”하고 녀마주이 모두를 잡아갔다고 하였다. 포위 당시 “막사에 없었거나 용케도 창문으로 도망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삼청교육대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sup>141)</sup> 재건대는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녀마주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지만,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쉽게 그들을 연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녀마주이들은 이미 국가의 관리체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또 다시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녕마주이와 더불어 노숙자도 주된 검거 대상이었다. 이들이 연행된 이유는 ‘무연고자’였기 때문이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제작진이 남긴 형사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면,<sup>142)</sup> 형사들은 “검거 대상이 줄어들다보니 무연고자들 상대로” 검거를 진행했다고 한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거가 부정확한” 사람들, “전과는 없지만 불량아들, 재활근로대원들, 소위 녀마주이들”을 많이 연행하였는데, “범죄를 할 우려”가 많고 “일반 주민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불량배’ 소탕이 목적이었지만, 깡패들은 “정보를 입수해서 다 도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했던 것이다. 더구나 노숙자나 녀마주이 같은 사람

139) 최희석 체험기, 「내가 겪은 삼청교육대」, 『녕마』 3호, 1987, 31~32쪽.

140) 김차균 체험기, 「내가 겪은 삼청교육대」, 『녕마』 3호, 1987, 32~34쪽.

141) 「내가 겪은 삼청교육대」, 『녕마』 3호, 1987, 27쪽.

142)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형사 인터뷰 자료

들은 연고가 없어 “가족들 항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신상으로도 좋고 나중에 후환”도 없기 때문에 주로 연행한 것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강제 단속은 1961년 5월 16일부터 시작하여 1963년 3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진행되어 총 51,194명을 검거하였다. 그 가운데 30,806명은 입건 송치, 11,698명은 즉심에 회부되었다. 국토건설사업장에 취역한 사람은 전체 인원의 10%도 채 안 되는 3,244명이 불과하였다.<sup>143)</sup> 신군부도 박정희 정권에서 실행한 것과 유사하게 ‘불량배’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국토건설사업장에 취역한 사람의 10배가 넘는 39,742명이 순화교육을 받아야만 했고, 그 가운데 10,016명은 근로봉사를 해야만 했다.

신군부는 삼청교육대로 연행된 사람들에게 ‘불량배’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불량배’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고, 강제연행 피해자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들을 ‘불량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연행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을 ‘불량배’로 낙인찍는 과정에는 언론도 적극 동참하였다. 언론은 순화교육이 사람들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의 뒷골목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못살게 군 흔적을 온몸의 문신과 칼자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거나,<sup>144)</sup> “주먹 하나로 술한 시민들을 괴롭혀 온 어제의 불량배들”,<sup>145)</sup> “사회의 독버섯처럼 군림하던 그들”,<sup>146)</sup> “그동안 주위로부터 불량배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멋대로 살아” 온 사람들이라며,<sup>147)</sup> 순화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주먹세계와 관련된 진짜 ‘불량배’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들뿐이었다. 언론은 확인도 검증도 없이 계엄사의

143) 한국군사혁명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1집 상, 1963, 824쪽.

144) 『동아일보』, 1980년 8월 13일자.

145) 『경향신문』, 1980년 8월 13일자.

146) 『동아일보』, 1980년 8월 22일자.

147) 『경향신문』, 1980년 8월 30일자.

발표를 보도한 것이었다.

언론은 일부러 문신이 있는 자들을 앞세워 사진을 찍고 신문기사로 내보냈다. 불량배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문신을 강조한 것이었다.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는 삼청교육대에 들어간 사람 모두를 ‘불량배’로 매도하기 위함이었다. 피해자들을 ‘불량배’로 매도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사회로 돌아가 폭로하거나 군인과 경찰 등 삼청교육 관련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피해자들은 이미 검거 과정에서부터 ‘불량배’,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언론이 그것을 더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진짜 ‘불량배’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불량배’는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처벌받아도 된다는 사회적 집단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 배제되었다.<sup>148)</sup> 삼청교육대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그 누구도 피해자들의 불만을 들으려 하거나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직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멸시하고 천시”하였으며, “죄인이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았다.<sup>149)</sup> 심지어 “동생들하고 원수지간”이 되거나,<sup>150)</sup> “17년간 동락을 같이해 온 두 아이의 엄마가 가출”하는 등 가족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151)</sup>

피해자들은 삼청교육 당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생활능력을 상실하였다. “퇴소 직후부터 좋다는 약은 한약·양약·똥물까지 가릴 것 없이 다 먹고 있지만 아픈 몸은 차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삼청교육대의 육체적 후유증은 컸다.<sup>152)</sup> 뿐만 아니라 퇴소 후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는 국

148)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앞의 책, 2001, 233쪽.

149) 전영순, 『추적 여자 삼청교육대』, 태웅출판, 1988, 155쪽.

150) 「한병주 자술서」

151) 「김태효 자술서」

보위의 발표와는 달리,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sup>152)</sup>

삼청교육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능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생계마저 어려워졌는데, 피해자들은 ‘불량배’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가 피해자들을 ‘불량배’로 낙인찍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뉘그러하게 폭로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 2. 빈민통제와 시민순화

부마항쟁과 5·18 광주항쟁에서 빈민은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하여 군사정권에 저항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항쟁을 진압한 뒤 불량배 단속을 실행하였는데, 맥락적으로 빈민의 저항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그들은 빈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와 같은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등장한 것이 삼청교육대 사업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단순히 피해자들을 선도하거나 교화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근로봉사와 보호감호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들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것은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의 국토건설단 사업과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국토건설단 사업은 민심 수습과 사회 통제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삼청교육대 사업과 유사하지만, 장기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군부는 빈민들의 저항을 경험하였다. 정권을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고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신군부는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그들의 저항

152) 『동아일보』, 1990년 2월 23일자.

153) 차형석, 「여자 삼청교육대는 꿈쩍했다」, 『시사저널』 678호, 2002.

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반 전과처럼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전과를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다.

1980년 7월 경 국보위의 문공분과위원회는 ‘일반사회정화 특별홍보계획’을 작성하였다. 1980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사실 및 특집취재와 특집방송을 통해 깨끗한 새 사회건설을 위한 특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내지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사회악 제거 실적과 순화, 근로봉사 현장을 신문·방송에 보도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sup>154)</sup>

문공분과위원회의 홍보계획에 따라 계엄사는 1980년 7월 31일 ‘불량배 소탕 및 순화계획’의 ‘별첨 서류 7호 홍보 및 보도지침’을 작성하였다. 순화교육을 심층 홍보하여 국민 총력안보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지역별 관할 지방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시로 현지 취재를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8월 1일부터 전 언론매체를 통해 “개과천선의 인간승리의 표본”, “자유적 생활과 자의적 근로봉사 모습”, “각종 미담” 등에 중점을 두어 삼청교육 홍보를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이었다.<sup>155)</sup>

국보위와 계엄사의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듯, ‘계엄포고 제13호’가 공포된 1980년 8월 4일부터 삼청교육대 사업에 대한 보도가 넘쳐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화교육을 통해 불량배들이 선도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 제13호’가 공포된 지 하루 만에 마치 모든 불량배가 소탕된 듯 “대부분의 국민들은 깡패들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였다.<sup>156)</sup> 또한 이번 특별 조치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그 밑바닥에서부터 뿌리 뽑으려는 일

154)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2007, 566쪽

155)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의 보고서, 2007, 566쪽;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13일자.

156) 『경향신문』, 1980년 8월 4일자.

대 획기적인 개혁”이라며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되었다.<sup>157)</sup>

언론은 ‘불량배’ 소탕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었다며 적극적으로 삼청교육대 사업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의 보도는 삼청교육대로 연행된 사람들을 진짜 ‘불량배’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언론이 삼청교육대의 긍정적인 모습과 효과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불량배’ 낙인찍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한 것은 국보위와 계엄사의 보도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보도지침의 존재는 이 사업이 단순히 불량배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군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삼청교육대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그리고 보호감호까지 피해자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감금, 격리시키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국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애국가조차 혐오”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국가에 대한 배신감”마저 강하게 들었다고 하였다.<sup>158)</sup> 신군부는 이러한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우려하였고, 사회로 복귀하여 불만 세력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신군부는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보호감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감옥’을 만들었다.<sup>159)</sup> 퇴소한 뒤에도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국보위는 순화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대해 지역·직장 정화추진위원회와 종교계의 주선으로 각 분야에 취업알선 등 생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람된 새 생활을 영위토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였다.<sup>160)</sup> 그러나 실제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157) 『동아일보』, 1980년 8월 5일자.

158) 전영순, 앞의 책, 1988, 99쪽; 장의덕, 앞의 글, 1988, 175쪽.

159) 정길화, 김환균 외,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해냄, 2006, 43쪽.

16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1980, 42쪽.

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삼청교육대백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인 전영순은 여자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후 퇴소할 때 ‘수료증’을 받았고, 이승용도 보호감호 후 출소할 때 ‘출소증’을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도록 의무화되었다고 한다.<sup>161)</sup>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크기의 ‘수료증’ 앞면에는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삼청 순화교육 수료자임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하였다.<sup>162)</sup> 전영순의 수기인 『추적 여자 삼청교육대』에는 이 ‘수료증’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혀 있다.<sup>163)</sup>

첫째,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둘째, 본 교육 수료자는 범법행위가 없는 한 차후 일제 검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

넷째, 본 증을 습득한 자는 우체통에 넣을 것.

‘수료증’ 뒷면의 내용은 전영순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수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김상열, 송영두, 이창호, 최홍운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료증’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볼 때,<sup>164)</sup> ‘삼청교육대 출신’을 증명하는 증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 출신’을 의미하는 ‘수료증’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삼청교육대백서』에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순화교육 대상자’라는

161)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앞의 책, 2001, 18~19쪽.

162) 김상열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제9차 보고서』 9(약칭 『진실화해 보고서』), 2010, 213쪽; 최홍운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0, 230쪽; 전영순, 앞의 책, 1988.

163)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위의 책, 2001, 34쪽; 전영순, 위의 책, 1988.

164) 김상열 진술, 송영두 진술, 이창호 진술, 최홍운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0, 213~230쪽.

낙인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한다.<sup>165)</sup>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원표를 확인하였으나, ‘순화교육 이수자’ 또는 ‘삼청’ 등의 표기나 스탬프 인이 찍혀 있는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sup>166)</sup> 그러나 1988년 당시 공화당 부총재였던 이종근은 그해 10월 19일에 “삼청교육 이수자의 주민등록표에 교육이수 비표가 표시돼 있다”고 하였고,<sup>167)</sup> 조용직 공화당 대변인도 노태우 정권의 전자신분증 계획을 비판하면서, “삼청교육 이수자의 주민등록표에 이수사실을 비표로 표시, 관리해서 큰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하였다.<sup>168)</sup> 피해자인 전영순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상단에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였으며,<sup>169)</sup> 김재복도 “면사무소에서 신원증명을 받을 때 ‘삼청교육 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였다.<sup>170)</sup>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주장이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삼청교육 이수자’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사는 순화교육을 이수하고 귀가 조치된 후에도 개인사정 및 주변상황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토록 각 부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sup>171)</sup> 또한 피해자들이 퇴소한 뒤 지역으로 돌아가면, 지역 사회정화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생활환경을 관찰하고, 동·면사무소에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sup>172)</sup> 동 보고서에는 이 카드의 견본이

165)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앞의 책, 2001, 20쪽.

166)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2007, 575쪽.

167) 『중앙일보』, 1988년 10월 19일자.

168)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31일자.

169) 차형석, 앞의 글, 2002.

170) 김재복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0, 217쪽.

171)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의 보고서, 2007, 572쪽.

17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의 보고서, 2007, 573쪽.

수록되어 있는데, 성명, 현재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 직장명, 연락처 및 통보책임자 등의 인적사항과 직업훈련 희망분야, 취업 희망 분야, 지원 불희망 사유 등 훈련 및 취업 희망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또한 사후관리상황이라 하여 날짜와 조치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sup>173)</sup>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위로금을 주어 격려해주는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동사무소에 갈 때마다 삼청교육대 출신인지 질문”을 받았으며,<sup>174)</sup> “가끔 경찰관이 집에 와서 동향을 관찰”해 갔고,<sup>175)</sup> “이사할 때마다 파출소에서 와서 ‘어떻게 지내느냐, 불편한 거 있으면 찾아와라’고 하면서 동향관찰”을 당했다고 하였다.<sup>176)</sup> 심지어 “생활이 곤란하여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 했는데 순화교육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사하였다고 해서 다툼” 일도 있었다고 하였다.<sup>177)</sup>

이렇게까지 신군부가 사후관리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고통을 주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신군부는 또한 일반 전과를 관리하듯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전과’를 이용해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1988년 ‘제5공 청문회’ 당시 신군부가 순화교육을 받으면 일반 전과 기록을 말소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말소해주시는커녕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마저도 전과로 기록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178)</sup> 피해자들의 정보를 경찰이 일반 전과처럼 전산화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이 삼청교육을 받으면 재범을

---

173)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기록카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2007, 669쪽 견본 수록.

174) 전영순, 앞의 책, 1988, 171쪽.

175) 이종천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0, 227쪽.

176) 이창호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0, 228쪽.

177) 최홍운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0, 231쪽.

178)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1일자.

방지하도록 관찰보호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였다고 한다.<sup>179)</sup> 입력 사항은 총 54개 항목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생활정도, 전과관계, 배후관계 등 강제연행 후 분류심사를 위해 작성한 「분류조사표」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전산조회로 활용되는 항목은 26개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정당, 주민번호, 최종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이다.<sup>180)</sup>

경찰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한 것이었다.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최 아무개 씨는 “착실하게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근처에서 사건이 생기면 형사들이 찾아오거나 경찰서에 불려가 ‘삼청교육대까지 갔다 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등 수사관들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81)</sup> 피해자들은 퇴소한 뒤에도 항상 감시를 당했고, 사소한 사건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채 구속받으며 살아가야만 했다.

신군부가 지역의 사회정화위원과 관할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전과를 만들어 관리한 것은 그들의 일상 전반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빈민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통제하려 했다. 빈민은 범죄자와 가까울 수도 있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항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방관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항쟁의 폭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다.

신군부는 빈민을 잠재적으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따라서 ‘잠재적 저항세력’인 빈민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

179)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2007, 575쪽.

18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의 보고서, 2007, 576쪽.

181)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1일자.

‘불량배’ 낙인찍기와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빈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었고, 사후관리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일상 전 영역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신군부는 빈민이 다시는 저항할 수 없도록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 배제시키려 했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공원과 노동자, 무직자, 녀마주이 등 빈민을 통제하려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1980년 당시 노동운동을 했던 공장노동자들은 삼청교육대를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동일방직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1978년 동일방직 사건으로 해고당한 추송례는 삼청교육대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혀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잡아갔는지 거리를 나설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몇 명 어울려 밤늦게 거리를 지나다가도 느닷없이 잡혀갔으니 운동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은 깊숙이 숨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함께 노동조합 활동하던 남자들도 모두 잡혀갔다. (중략)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sup>182)</sup>

원풍모방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1982년 말 경찰에 의해 연행된 조합원 방순영도 삼청교육대를 회상하며 1981년 12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기를 남겼다.

“겨울이 오면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이 추운 겨울 이맘때면 다시 스쳐간다. (중략) 겨울을 맞이하면서 떠올리는 16명에 대한 무더기 집단 정화. (중략)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노동자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게 잘못된 것일까.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정의롭게 했다는 게 죄가 된다는 걸까. 왜 우리의 선배님들은 정화라는 이름으로 무더기로 쫓겨나야만 했나. 노동계 사상 유례없이 16명이라는 인원이 발악 한 번 못

---

182) 추송례, 「어김없이 봄은 오는가」, 『실업일기』, 미르인쇄, 2001, 80쪽.

해보고 권력 앞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지난 겨울은 우리에게 악몽의 세월이었다. (중략) 폭력배들이나 가는 순화교육을 남자 간부들은 갔다 왔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죄의 대가가 결국은 정화이며 순화교육이었던가.”<sup>183)</sup>

순화교육을 받은 공장노동자들은 2,967명으로 순화교육 인원 전체의 7.45%를 차지한다. 그들은 순화교육을 통해 삼청교육대의 폭력성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의 ‘공포’ 분위기를 잊지 못해 두려워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학생과 교수, 언론인, 의사 등 지식인층도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장노동자들, 특히 노동운동가들에게 있어 삼청교육대는 ‘공포’ 그 자체였다. 어떤 공장노동자는 “노동운동도 좋지만 이렇게 짐승처럼 당할 바에야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겁이 나서 노동운동도 때려치워야겠다”라고까지 할 정도였다.<sup>184)</sup> 노동운동가들에게 삼청교육대는 엄청난 ‘공포’였던 것이다.

삼청교육대의 폭력성은 단순히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그리고 보호감호 속에서 나타난 것만은 아니었다. 위의 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삼청교육대 사업은 그 자체가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느닷없이” 잡아가는 삼청교육대 사업에서 나타난 폭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리를 나설 수조차” 없었고, “운동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깊숙이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공장노동자들에게 있어 삼청교육대는 노동운동을 한 “죄의 대가”였고,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이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공장노동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빈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 통제력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을 길들이고 순응시키려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

183) 방순영, 「원풍모방 조합원 방순영의 일기 - 겨울이 오면」, 1981

184)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5·17이후의 노동운동」, 1983, 6쪽.

박정희 정권이 국토건설단 사업을 활용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려 했던 것과 같이 신군부도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을 규율화 시키려 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국토건설단 사업에는 깡패나 불량아보다 병역기피자와 직장인,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은 이른바 ‘군기’를 잡기 위해 그들을 건설 사업에 동원하였다.<sup>185)</sup> 삼청교육대 사업도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론인 35명, 공무원 32명, 교수 포함 교원 13명 등 지식인층도 연행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연행된 사람 가운데 해직기자도 포함되어 있었고,<sup>186)</sup> 바른 말을 하거나 바른 기사를 쓴 사람도 있었다고 하였다.<sup>187)</sup> 전직 군수이자 충주 MBC 사장이었던 류호도 삼청교육대로 연행되었다.<sup>188)</sup> 그는 1980년 7월 경 전국 방송 사장 회의에서 문공부 장관에게 “앞으로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면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고 그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삼청교육대로 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sup>189)</sup> 삼청교육대 사업이 언론인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었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교사도 삼청교육대로 연행되었다. 1980년 8월 당시 현직 교사였던 정충제는 자신이 무슨 죄로 잡혀가는지 몰랐다고 하였다.<sup>190)</sup> 그는 “일개 평범한 학교 선생인 내가 무슨 죽을죄라도 지었던 말인가”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sup>191)</sup>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그리고 보호감호까지 총 363일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

185) 한규한, 앞의 글, 2015.

186) 류영근, 앞의 글, 1988(2), 413쪽.

187) 정인수, 「삼청학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해결방안」, 『월간 맑은세상』 12월호, 1988, 85쪽.

188) 류호, 「빨간모자의 악동과 꼭두각시들」, 『엔터프라이즈』 8월호, 1988.

189) 류호, 위의 글, 1988, 394쪽.

190) 정충제, 『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 청사, 1988, 24쪽.

191) 정충제, 위의 책, 1988, 28쪽.

언론인, 공무원, 교원 등이 삼청교육대로 연행된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된 국보위의 사회개혁 조치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보위는 출범한 직후부터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금융인, 언론인 등 사회의 각계각층에서의 각종 부조리와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실행하였다. 국보위의 사회정화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 국민을 정화 대상으로 삼은 삼청교육대 사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실행되었지만, 강력한 폭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화운동과는 다르다. 특히 보도지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폭력성은 은폐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을 단순히 봉체조나 유격훈련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매우 가혹하였다. 한 겨울에 발가벗은 몸으로 나무에 올라가 땀땀 거리는 ‘겨울매미’, 얼음장 같은 시냇물 속에 알몸으로 들어가 응달샘 노래를 부르는 ‘응달샘’, 펜티 차림으로 양팔을 벌린 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군인들에게 구타당하는 ‘뺨빠라’,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신문읽기’ 등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기합을 받았다.<sup>192)</sup> 심지어 식사부터 생리현상까지 모두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였다.<sup>193)</sup> 피해자들은 현역 군인들보다도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는 등 폭력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살아야만 했다.

신군부는 기존의 사회정화운동으로 숙정의 대상이 된 그들을 은폐된 폭력이 존재하는 삼청교육대로 보냈고, 그곳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 그들은 ‘불량배’와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빈민도 아닌 지식인층이었지만, 신군부는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이른바 ‘군기 잡기’를 실행했던 것이다.

---

192) 류호, 앞의 글, 1988, 400쪽; 윤일웅, 앞의 글, 1988, 315쪽.

193) 류영근, 앞의 글, 1988(2), 412쪽; 전영순, 「여자들은 이렇게 당했다」, 『엔터프라이즈』 8월호, 1988, 427쪽.

신군부는 또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 당시 언론은 ‘불량배’로 표상된 피해자들이 순화교육을 통해 선도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동시에, 그들이 “한쪽에선 유격, 한쪽에선 공수접지, 한쪽에선 제식, 한쪽에선 봉체조 등 현역군인들도 힘들다는 강훈련”을 받고 있으며,<sup>194)</sup> “유격 64시간, 각개전투 36시간, 제식훈련 30시간, 정신교육 24시간, 체력단련 24시간”이라는 고된 훈련을 견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95)</sup> ‘불량배’로 낙인찍힌 피해자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

정충제의 수기인 『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에는 허호근이라는 노동자가 삼청교육대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는 삼청교육대 사업이 “국민들에게 겁을 주자는 것이고 덧붙여 선진도 해보자는 속셈”이라고 하면서, “‘봐라 까블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서니 폭력배 사기꾼 등 범죄자들이 모두 동면하러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 없어져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하고 내송을 떠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96)</sup>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의도한 것은 폭력을 과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었다. “까블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신군부의 응징이 그만큼 강력한 폭력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군부는 일반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반발이나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삼청교육대에서 나타나는 신군부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폭력이 혐오의 대상인 ‘불량배’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 폭력을 그들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불량배’는 처벌받아도 된다는 사회적 집단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군부가 피해자

194) 『동아일보』, 1980년 8월 13일자.

195) 『동아일보』, 1980년 8월 30일자.

196) 정충제, 앞의 책, 1988, 182쪽.

들을 ‘불량배’로 낙인찍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허호근이 설명한 것처럼, 삼청교육대 사업으로 범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군부의 폭력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정당화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신군부가 지속적으로 과시한 힘을 느끼고, 스스로 삼청교육대 사업에 동참자가 되었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불량배’를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불량배’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연행되었다. 그 가운데 빈민도 많았는데, 신군부는 그들을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잠재적 저항세력’인 빈민을 ‘불량배’라는 명분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면서 통제한 것이다. 또한 삼청교육대 사업은 지식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신군부가 요구하는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

## V. 맺음말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광주항쟁 과정에서 빈민들은 군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항쟁의 확산을 우려한 군사정권은 항쟁을 진압한 직후, 전국적으로 ‘불량배’ 단속을 실행하였다. 당시 권력자들은 항쟁 과정에서 학생, 중산층이 아닌 빈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이들이 항쟁에서 실제 폭발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크게 경계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항쟁에 참여한 빈민들을 처음부터 ‘불량배’, ‘폭도’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불량배 단속은 ‘잠재적 저항세력’이었던 빈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탄압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이러한 ‘불량배’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신군부는 ‘불량배’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하였지만, 전과가 전혀 없거나 이미 법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연행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불량배’란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람들이 쉽게 ‘불량배’로 몰아갈 수 있었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해 ‘불량배’ 낙인찍기를 실행하여 피해자들을 진짜 ‘불량배’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신군부는 ‘불량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속적으로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 하였다.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불량배’를 선량한 시민으로 선도, 갱생시킨다는 목적과 달리, 순화교육 내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만이 있었다. 순화교육을 마친 피해자들 가운데 1만여 명은 자원서라는 방식을 통해 6개월간의 근로봉사를 해야만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개과천선시킨다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 피해자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군부대만을 위한 봉사를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도 7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회보호법에 의해 1~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

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짧게는 4주, 길게는 5년 이상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감금되어 살아야만 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선도와 교화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감금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빈민이 많았는데, 항쟁 과정에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군부는 빈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언론을 활용하여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장하였다. 또한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전과를 만들어 퇴소한 뒤에도 그들의 일상 전반을 감시하였다. 신군부는 ‘잠재적 저항세력’인 빈민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 배제시켰던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빈민 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있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불량배’라고 보기 어려운 교수나 언론인 등의 지식인층도 삼청교육대로 연행되었다. 신군부는 이른바 ‘군기 잡기’를 통해 그들이 반발이나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길들이려 했던 것이다. 또한 신군부는 지속적으로 ‘불량배’로 표상된 피해자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은 신군부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불량배’로 향한 그 폭력에 정당함을 느껴 스스로 동참자가 되었다. 신군부는 삼청교육대 사업을 통해 ‘시민순화’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은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반발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박정희 정권은 국토건설단 사업을, 신군부는 삼청교육대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토건설단 사업과 다르게 사람들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과 노동규율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토건설단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신군부가 집권하는 1980년은 경제도 많이 발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계획으로 노동규율도 대부분 확립되어 있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 국토건설단 사업보다 명분이 더 취약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군부는 격리와 고립이라는 방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 방식으로 ‘불량배’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힌 피해자들, 특히 ‘잠재적 저항세력’인 빈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삼청교육대 사업은 5·18 광주항쟁과 같이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5·18 광주항쟁과는 다르게 지식인이냐 언론인, 심지어 학생들조차 삼청교육대 문제를 거론하거나, 그것의 인권 문제를 규명하려 하지 않았다. 신군부가 그들을 피해자들과 다른 존재로 구분지은 것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향한 시선에 여전히 ‘불량배’라는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문제는 신군부의 폭력성과 인권 의식, 그리고 통치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5·18 광주항쟁처럼 삼청교육대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사업을 빈민통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글이다. 신군부는 빈민을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여겼고, ‘잠재적 범죄자’, ‘불량배’로 몰아가며 통제하려 하였다. 통제 방식은 사업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신군부는 삼청교육대 사업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을 길들이려고 하였다. 강력한 힘의 과시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신군부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사업은 신군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빈민을 통제하고, 일반 시민을 순응시키려 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한다.

## 참 고 문 헌

### I. 1차 자료

####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 《잡지》

김형우, 「삼청교육대 공 세운 전직 경찰관의 참회록」, 『신동아』 8월호, 2011

류영근, 「우리는 정권탄생의 제물이었다」, 『엔터프라이즈』 8월호, 1988

\_\_\_\_\_, 「죽음의 지옥생활 삼청교육」, 『한민중』 11월호, 1988

류호, 「빨간모자의 악동과 꼭두각시들」, 『엔터프라이즈』 8월호, 1988

박정수, 「청송 감호소를 가다」, 『사법행정』 7월호, 1989

심산, 「야수적 폭력행위 삼청교육대를 폭로한다」 1-5, 『말』 11월호-3월호, 1987-1988

윤일웅, 「삼청교육대 그 비극의 전말」, 『월간조선』 11월호, 1988

이기창, 「순화교육 체험기」, 『민주노동』 5월호, 1984

장의덕, 「제2의 광주학살 삼청교육」, 『엔터프라이즈』 11월호, 1988

전영순, 「여자들은 이렇게 당했다」, 『엔터프라이즈』 8월호, 1988

정인수, 「군은 삼청학살에 대하여 고해하라」, 『말』 10월호, 2004

\_\_\_\_\_, 「삼청학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해결방안」, 『월간 맑은세상』 12월호, 1988

정조승, 「청송보호감호소」, 『월간조선』 5월호, 1990

차형석, 「여자 삼청교육대는 끔찍했다」, 『시사저널』 678호, 2002

최원필, 「내가 겪은 삼청교육」, 『월간조선』 8월호, 1988

녕마공동체, 『녕마』 12월호, 1987

#### 《수기》

류영근, 『그 황무지가 장미 꽃 같이』, 목민, 1988

이강준, 『삼청교육 5호작전』, 두풍, 1988

전영순, 『추적 여자 삼청교육대』, 태웅출판, 1988

정충제, 『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 청사, 1988

### 《정부 측 기록》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IV, 삼신인쇄, 1994

계엄사편찬위원회, 『계엄사』, 육군본부, 198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198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불량배 소탕계획(초안)」, 1980년 7월 29일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8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상)』 2, 2007

사회정화위원회, 『사회정화운동사』, 사회정화위원회, 198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제9차 보고서』 9, 2010

한국군사혁명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1집 상, 1963

### 《기타》

「강원도 삼청교육 관련자 사망 신고서」, 1989

「김태호, 배웅준, 이봉수, 이수영, 조병환, 최영환, 한병주 자술서」

「원풍모방 조합원 방순영의 일기 - 겨울이 오면」, 1981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1989년 1월 24일), 제10호(1989년 2월 9일), 제11호(1989년 2월 10일)」

충북 지역 경찰서, 「분류조사표(신상카드)」, 1980

평화민주당 삼청교육대비리조사특별위원회, 「삼청교육대 피해자 접수 보고서」, 1988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노동문제의 현안에 대한 보고서」, 1981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5·17 이후의 노동운동」, 1983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료집

## II. 2차 자료

### 《단행본》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2006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2

- \_\_\_\_\_,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1권』, 인물과사상사, 2003
-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 광주항쟁진상조사특별위원회 통일민주당, 『5·18 광주민중항쟁자료집』, 1988
-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 현실문화, 2011
-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 미셸 푸코 저,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 \_\_\_\_\_,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 \_\_\_\_\_,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 돌베개, 2002
- \_\_\_\_\_,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 돌베개, 2002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중항쟁사』, 1985
-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비, 2001
- 사계절 편집부,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 사회 1, 2』, 사계절, 1984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삼청교육대백서(상)』, 하나로, 2001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 2005
- 에릭 홉스봄 저, 이원기 역, 『폭력의 시대』, 민음사, 2008
- 영등포 산업선교회 시사교양교실, 『시사교양자료 삼청교육대』, 1988
-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 교과위원회, 『부마민주항쟁사』, 1990
-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실업일기』, 미르인쇄, 2001
- 정길화, 김환균 외,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해냄, 2006
-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비평사, 2011
- 조희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 최정기, 『감금의 정치』, 책세상, 2005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4』, 풀빛, 1991
- 한나 아렌트 저, 김정환 역, 『폭력의 세기』, 이후, 2000

### 《논문》

- 곽건홍,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3집, 한국사회사학회, 1986
-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 - 아동복지와 ‘부랑아’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 김원,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김종화, 「도시빈민에 관한 연구」, 『법정논총』 42,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1988
- 노영기, 「충을 든 시민들, 시민군」, 『역사비평』 107, 역사비평사, 2014
- 박홍근,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 - 녕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8, 한국사회사학회, 2015
- 안종철, 「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20, 한국동북아학회, 2001
- 예지숙, 「일제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2014
- \_\_\_\_\_,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역사』 107, 한국사회사학회, 2015
- 오제연,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 시민지 초기 부랑자표상의 현실효과」, 『사회와역사』 89, 한국사회사학회, 2011
- 유영국,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4월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을 중심으로」, 『부산학총서』 2,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4
- 윤여덕, 「산업화와 도시빈민층 형성」, 『정신문화연구』 2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 윤수중, 「녕마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 \_\_\_\_\_, 「녕마주의와 국가: 녕마주이의 집단수용의 역사」, 『진보평론』 56, 진보평론, 2013
- 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 이창언,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공안통치」, 『내일을 여는 역사』 53, 내일을 여는 역사, 2013

- 임상혁,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법과 사회』 22,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 임송자,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 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 정근식, 「부마항쟁과 79-80레짐」, 『지역사회학』 2, 지역사회학회, 2000
- 정수남, 「1960년대 ‘부랑인’ 통치방식과 ‘사회적 신체’ 만들기」, 『민주주의와 인권』 15,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 조경희, 「‘온정’과 ‘교화’의 식민주의 -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회구제사업과 그 임계-」,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 조영윤, 「1920~1930년대 빈민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 조옥라,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지역운동」, 『현상과인식』 4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8
- 조흥식, 「70, 80년대 산업화와 빈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 한규한, 「5·16 쿠데타 직후 국토건설단과 지식청년 ‘군기잡기」,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 홍석률, 「박영두 사건과 삼청교육대」, 『역사와책임』 7,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2014

## ABSTRACT

### Samcheong Education Camp and Government control to the poor

Son Kwang Myou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oor actively resisted military regime in 1979 Busan-Masan Uprising and 1980 5·18 Gwangju Uprising. After strongly suppressing the uprisings, Park Junghee regime and New Army group conducted nationwide 'hooligan' crackdown, worrying about spread of uprising. In this process, majority of those conducted away were the poor rather than students or the middle class citizens, since they were considered as potentially threatening existence to the government. They controlled them by considering them as 'hooligan', in order to prevent resistance of the poor beforehand. Samcheong Education Camp business was planned in the context of such control.

New Army group conducted Samcheong Education Camp in the name of eradicating 'hooligan', however there actually were lots of people who had no criminal record or already punished by law. Actually, it was difficult to consider the majority of the victims as 'potential criminals', and since the concept of 'hooligan' itself was ambiguous, accordingly, wide range of people could be the target of arrestment. The media created negative public opinion as if the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Camp were the actual 'hooligan', and the victims were socially isolated as interconnected with social prejudice regarding 'hooligan' could be

punished.

Due to Samcheong Education Camp business, the victims were isolated from the society from 4 weeks, shortest, up to more than 5 years. The victims couldn't but had complaint about the New Army group as they had been arrested for a long time. New Army group worried about them forming dissatisfactory power when they return to the society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y isolated the victims from the society while conducting purification education as well as labor service and protective custody to interrupt their repulsion and resistance.

Samcheong Education Camp business aimed at thoroughly isolating and secluding the victims from the society. Particularly, it targeted the poor, 'potential resistance'. New Army group consistently promoted negative image of them utilizing the media. Also, in the name of follow-up management, they tried to watch and control their whole ordinary life through the criminal record regarding 'a person from Samcheong Education Camp'. The poor couldn't but be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society since they were still considered as 'potential criminals' even after being discharged from Samcheong Education Camp.

New Army group intended to train general citizens, besides the aim to control the poor utilizing Samcheong Education Camp business. Above all, they conducted so called 'military discipline' at Samcheong Education Camp targeting the intellectuals, who were not the 'hooligan' nor the poor. Also, the New Army group continuously showed the sight of punishing the victims who symbolized 'hooligan'. General citizens considered violence against 'hooligan' justifiable while they felt fearful of the power of New Army group. General citizens became the participants in Samcheong Education Camp business.

This research analyzed Samcheong Education Camp business of New Army group focusing on the control over the poor. Samcheong Education Camp was a very important affair to understand violence, human rights awareness, and governing style of New Army group. Therefore, the researcher consider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is matter from various

viewpoints including damage case and problem thereof, and awareness on Samcheong Education Camp, etc.